

700MHz 주파수 할당, DTV 이후로 유보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기자회견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졸속적인 주파수 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재벌 우대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이번달 6일 서울시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열렸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최재훈 KBS노동조합 위원장, 지상파 4개사 언론노조 본부 위원장, 그리고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연개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연합회원이 참석하여 방통위의 700MHz 주파수 통신사 우선 할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사들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모든 주파수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주파수 할당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자리에서 양창근 연합회 회장은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을 결정할 당시 주파수 효율이 높은 유럽식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식 방식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꼬집으며 "현재 방통위의 700MHz 주파수 할당 정책은 2004년 당시 정부가 가전제품 재벌의 입김에 놀아난 것처럼, 통신재벌의 입김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를 '도박판'이라 규정하며 "돈 잔치로 끝나버린 주파수 경매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미룬 방통위가 이제는 700MHz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안겨주려 한다"며 "오만한 방통위는 주파수 정책을 온전히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DTV 전환 전후로 야기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00MHz 주파수를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어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700MHz 주파수 통신 할당 정책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의 출입구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심지어 그 건물의 부지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이라며 "언론노조 차원에서라도 이번 종합편성채널 특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이번 700MHz 주파수와 관련된 현안도 반드시 추가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사퇴와 방통위 해체, 그리고 해당 간부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기자회견장에 나선 조준상 연개련 사무총장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MHz 주파수는 4-5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이를 통신재벌에 무조건, 그리고 조건없이 밀어주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 '발악'이라고 본다"며 운을 뚫고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에 배정하겠다는 방통위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무조건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기 전에 2가지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통신사의 수요 입증과 데이터 트래픽 해소 노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해당 주파수를 받으려 하는 통신사들은 압축 기술을 통한 기술개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그 결과 보고를 공개해야 하며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연구발표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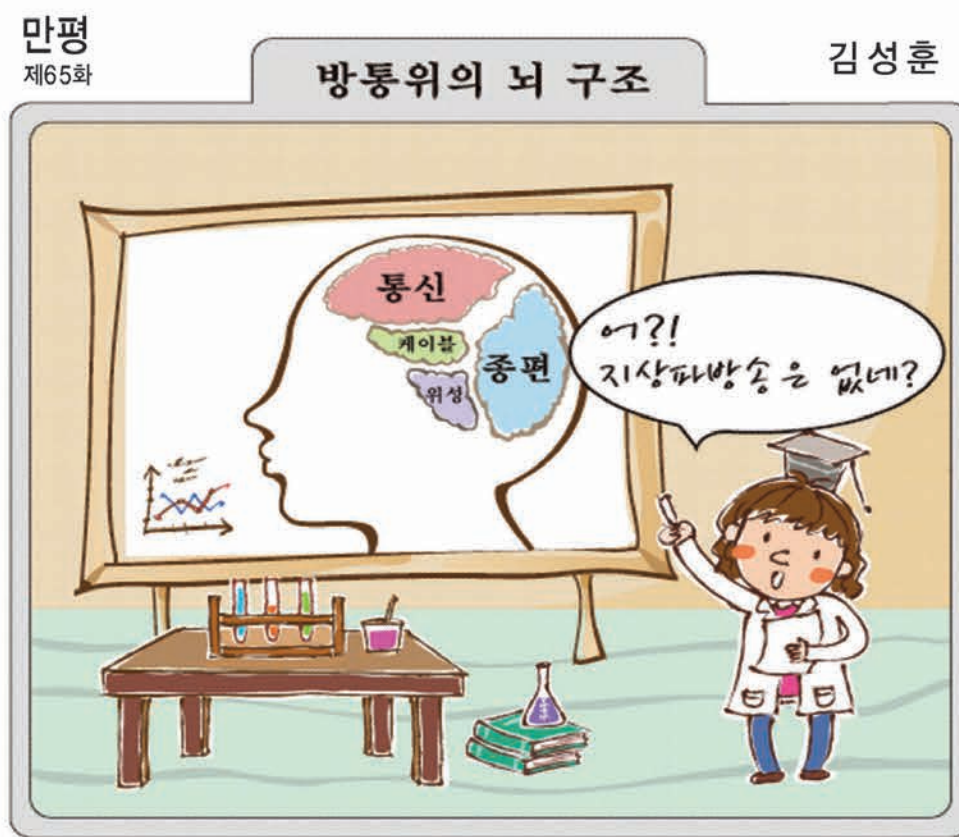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는 "주파수는 공공재로서 시청자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함을 방통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계속)

(이어서)이 외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용규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난시청 해소와 미래방송을 위해 시간을 두고 해당 주파수 할당을 DTV 전환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은 "방통위의 해당 주파수 연내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한웅 언론노조 SBS본부 부위원장은 "주파수를 토지에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 방통위의 정책은 난개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오염행위"고 전했고 류성우 언론노조 EBS본부 위원장은 "방통위는 종편을 위해 지상파에 무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주장하며 "700MHz 주파수를 DTV 전환 이후로 연기해 시청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영하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의 성명서 낭

독으로 발언이 끝났다. 한편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양창근 연합회장과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 사무실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에게 연합회가 준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연기하라'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12월 지상파 4사는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확보할 수 있는 700MHz 필수 주파수를 2013년 DTV전환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며 주파수 혼신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시청 해소는 물론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연기하라!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재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공공재를 온전히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하고 운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공익의 가치로 판단해야 할 주파수 정책을 친 통신업체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균형성장은 외면하고, 주파수를 단순히 '산업적인 논리'로만 재단해 해당 주파수 전체를 통신업체에 주고자 안달이 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통위의 통신재벌 우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방통위는 2004년 우리나라 DTV 전송방식 선

정 당시를 상기하라! 당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은 DTV 전송방식에 있어 저비용과 주파수 효율이 탁월한 유럽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주파수 효율이 낮은 미국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은 오늘날 또 다시 주파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정부가 유럽방식을 선택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주파수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DTV 전송방식에는 VSB방식과 OFDM방식이 있다. 현재 2가지 방식 중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VSB방식을 선택한 나라는 미국, 한국, 캐나다 정도뿐이다. 이에 반해 주파수 효율이 월등한

OFDM방식은 유럽, 일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 한번이라도 과거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었던가?

방통위는 두 번 다시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현재 지상파 TV 시청은 KBS 수신료 월2,500원, 연30,000원이면 모든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재벌을 통한 TV시청은 1년에 수십만 원의 지불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게 된다. 도대체 방통위가 통신재벌의 뒷돈인 주파수를 대주면서 죄 없는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4년

엔 가전업체의 입김에 놀아나고, 이번에는 통신업체의 입김에 흔들릴 것인가? 더 이상 통신업체의 탐욕으로 일그러진 엄청난 주파수 경매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DTV 전환이 완전히 끝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스스로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통해 올바른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후에도 방통위가 주파수 정책에 있어 통신재벌만을 위한 우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시에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12월 6일



사설

재송신 분쟁, 방통위가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일, 광화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최로 전국언론노조, KBS노조, MBC노조, SBS노조, EBS노조,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00여 명이 모여 방통위의 700MHz 주파수 통신재발 할당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는 케이블 협회의 서명운동이 한창이었다. 그들은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상파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일반 시민들에게 받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받아본 유인물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번 재송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케이블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대목이다. 재미있는 말이다.

SO들이 난시청해소에 적극적이었다?

우선 난시청 해소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케이블 방송 사업 중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살펴보면, SO는 대도시 등에 지상파 외에도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등 PP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곳이고 RO는 강원도 및 도서 지역에서 지상파와 종교방송 등 비교적 기본적인 방송의 송출을 담당하는 곳이다. 즉 난시청 해소에는 CJ헬로비전 같은 SO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권을 보장하게 해주는 RO가 더욱 공이 큰 것이다. 갖은 채널 다 묶어서 대도시에 자신의 유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엄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쓰겠다고 하는 SO들이 이번 재송신 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금까지의 난시청 해소'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셈이다.

SO는 할 말이 없다

SO들은 이번 재송신 중단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지상파는 이러한 부분은 다 무

시하고 콘텐츠 비용을 요구하며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난시청 해소는 수익성이 떨어져 지방에는 잘 진출하지 않은 SO가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히 기본적인 지상파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RO들의 공이며, 동시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시설을 준비하며 DTV 전환 이후에도 완벽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주파수를 확보하려 하는 지상파쪽의 공이 더 크다.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크게 부각시키고, 불리한 부분은 애써 감추며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감행하려 하는 SO들의 '꼼수'라 볼 수 있다. 그들은 시청자를 볼모로 재송신 중단 사태를 일으키고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밝혔듯이 지상파 콘텐츠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산정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지금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내년 하반기에는 KBS의 경우 약 96%의 지역이 직접 수신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과 IPTV는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지상파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RO들도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다면 RO들은 합당한 저작권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에도 요구한다. SO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채널 선정 송출의 재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어서 안 된다. 이번 종편 출범이후 변경된 채널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부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정책 결정에 내려야 하며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방송학회 및 한국광고학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한미 FTA 체결 상황에서 일반 미디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다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보조금 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송 콘텐츠 육성의 측면에서 특히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채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

비스가 이뤄지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료 다채널 서비스 가입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현재 저비용 저품질 비즈니스 모델에 지상파 콘텐츠 재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유료 다채널 서비스를 펼쳐버릴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실시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과 유료 사적 서비스 방송이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탁재택 KBS 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도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수록 공영방송은 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 문제를 비롯한 차세대 방송 문제 역시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 해법이 시청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언론노조 총파업 '종편 반대'

이번달 1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와 광화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특혜종합선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개국을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열렸다. 이번 총파업은 종편의 개국일인 1일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전국 45개 언론사 1,500명의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지역 방송국 및 신문사 직원들이 참가했다. 우선 언론노조는 오후 3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 집결해 종편개국에 영향력을 미친 한나라당을 압박했으며 이 자리에서 눈물까

지 글썽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건강한 언론구도가 망가졌다"며 "정부의 비호아래 출범한 종편의 탄생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저항의 깃발을 들어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리자"고 투쟁사를 이어갔다. 한편 오후 5시가 되자 종편 개국 축하쇼가 열리는 세종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언론노조는 집회신고가 되지 않아 회관 계단에 움집해 총파업 집회를 이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언론노조와 보폭을 함께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오후 6시 경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거리행진에 동참한 뒤 해산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재송신 협의 혼돈 속으로

14일까지 협의 연장...RO 성명 발표 '변수'

지상파와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케이블간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케이블의 재송신 중단 결정 이후 다시 재개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14일까지 협의를 이어가는 것에 합의하는 선에서 1차 논의를 마쳤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RO들의 모임인 '한국유선방송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케이블 TV는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으나 합법적인

저작권 대가를 주지 못하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기본적인 지상파 방송을 송출해온 자신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SO들이 지상파와 재송신 중단을 무기로 시청자를 겁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향후 시청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이에 14일까지 연기된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협상

에서 케이블, 특히 SO들은 자신들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이었던 공로'를 마냥 내세우기에는 이번 RO들의 주장으로 인해 그 근거가 희박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이라는 '히든카드'로 양측을 압박할 기세여서 향후 재송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협상전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종편 '의무 재송신' 폐지해야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재송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라디오21 강당에서 방송독립포럼 주최로 열린 '종편 밀어붙이기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종편의 의무 재송신 규정 등 비대칭 규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꼭 철폐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갖는 공적 특성은 이들이 보도·여론을 통한 공론장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편성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KBS 1TV와

EBS만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KBS 2TV와 MBC를 포함해 민영방송인 SBS도 방송법상의 의무편성 채널은 아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국내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종편이 지상파 방송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종편에 의무 재송신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매체이므로 콘텐츠 층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편성과 광고 등에서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

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종편은 의무 재송신, 황금채널부여, 중간광고허용 등 굵직한 특혜를 받고 개국했는데 거기다 더해 지상파에 비해 광고시간도 늘려주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비중을 20~30%(지상파 60~80%)까지 줄여주는 등 규제까지 대폭 완화해 줬다. 하지만 실제 방송내용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방송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종편이 도입되었지만 일단 도입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종편, 넌 낙제야”

문성이 부족"하고 "차별화 전략이 보이지 않음"며 동시에 "보수정책 일변도에 선정적인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는 이번달 9일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을 밀어주는 방통위는 '종편특혜위원회'이며 어이없는 방송실수를 저지르며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이는 방통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상 언개련 사무총장은 "학생에게 필요한 방송인 EBS를 몰아내고 저조한 시청률로 국민의 외면을 받

고 있는 종편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도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를 통신재발에 부당하게 주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고 비판하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에 협의체임을 포기한 방통위가 종편 개국이라는 사태를 야기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조선, 중앙, 동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4조 4항 편성규약제정 위반 및 81조 1항 시청자위원회 결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1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열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은 대상 이외에도 KBS 박주택, MBC 김성우, SBS 하태웅(이상 우수상), KBS 김철성·김병수, MBC 박해준, CBS 황준식, BBS 방송기술인협회, YTN 이재우, OBS 김진팔(이상 격려상) 등 총 8팀에 방송기술 및 방송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를 인정하고 포상했다.

방송기술대상은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수여되는 방송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KBS 김선권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 KBS 홍수완 이사, SBS 박영수 기술담당부본부장, EBS 김석태 본부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사장, 노윤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 안덕삼 조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방송 편성표요? 그거 네이버에 있는데?"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한 종편 방송사에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이 방송 편성표를 물어보자 돌아온 답변 中...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는 종편, 무슨 아프리카TV 개인 방송하세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나라의 문화를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 종편의 '시중'을 들고 있고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조중동시중위원회'가 되어가고 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9일 종편 반대 기자회견 中...시중이란 이름에 그런 오묘한 뜻이 있을 줄이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7일 연세대 강의 中...내년까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희생의 표본을 보여주세요. 이런 부탁입니다."

더 강력한 방송기술 정책이 온다

급변하는 방송기술 정책을 선도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뉴미디어 연구반>과 <교수자문단>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앞으로 연합회의 비약적인 정책능력 상승이 기대된다.

우선 <뉴미디어 연구반>의 경우 방송기술 분야에 있어 뉴미디어의 효과적인 발굴과 방송기술의 위상 강화를 위해 발족했으며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벌이는 연구위원회에는 이만규 위원장(KBS)을 필두로 박형일(YTN), 서진수(EBS), 이정규(TBS)로 구성되었다.

한편 연합회에서는 <교수자문단>도 정식으로 발족했는데, 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또한 차세대방송기술 발전의 진흥을 위해 연합회가 미리 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년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총 8개월동안 활동하는 이들은 강민구 한신대 교수, 김용구 한독미디어 대학원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한양대 교수, 박상호 방송협회 연구원과 박승우 연합회 사무처장, 유호진 정책실장, 장안정 연합회 사무처 차장으로 구성되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정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백선하 최진홍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키워드로 보는 재송신 분쟁

새로운 방송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며 다양한 관련 정책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정책지 <방송기술저널>은 2011년 10월 5일 129호부터 '2011 방송가 핵심 키워드를 읽는다' 특집을 신설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정책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강해 나가야 하는 방송정책을 소개하고 진단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섯 번째 순서는 '키워드로 보는 재송신 중단 사태'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특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편-2011 방통위 국감을 진단하다
2편-700MHz 주파수, 핵심은 무엇인가?
3편-3D 기술과 영상 패러다임의 변화
4편-UHDTV에 방송의 미래를 묻다
5편-디지털 전환, 미디어 발전의 핵심이다
6편-키워드로 보는 재송신 중단 사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는 현재 700MHz 주파수 문제와 DTV 전환 현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방송기술정책의 핵심이며 필수불가결한 기술의 미래다. 이에 이번 특집을 통해 관련 현안을 짚어보자.

지상파-케이블 간에 벌어진 재송신 중단 관련 분쟁은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아주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 700MHz 주파수 할당과 함께 방송정책 분야의 뜨거운 화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번 재송신 문제에 있어 대략적인 흐름은 짚어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재송신 사태를 둘러싸고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 내면을 키워드별로 살펴보겠다.

1. 개요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던 케이블은 법원의 판결이 지상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이에 불복, 방송통신위원회의 어설론 중재 노력을 가뭄히 무시하고 11월 28일 지상파 HD 재송신 송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도중에 몇 번 극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으나 결국 협상 결렬의 수순을 밟은 케이블측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최저 콘텐츠 사용료 280 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HD 방송 송출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동시에 안팎의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된 케이블은 결국 HD방송 재송신 중단 8일만에 전격적으로 방송을 재개했으나 만약 지상파와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날로그 방송 송출까지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4일까지 협상은 연장되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키워드 1) 콘텐츠 사용료

이번 재전송 문제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 저작권이다. 케이블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가 콘텐츠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공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사업을 하는 자신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앞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절대 사업적인 용도로 움직이는 케이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케이블 사업자들, 특히 SO들은 지상파 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 엄연히 '수익'을 내고있는 곳이다. 즉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엄연히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인을 위해 무료 배포한 백신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2P 사이트 담당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잡다한 프로그램과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파는 행태와 같다.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에 대한 지상파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유는 또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는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며 나아가 재송신과 관련된 '동시방송중재권'(저작권법 제85조)을 명시해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가치를 저버린 적이 없으며 유료 방송의 경우에는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창출 도구로 활용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키워드 2) 난시청 해소 문제

케이블측은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 해소 의무를 외면해왔고 이에 국민들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TV 서비스를 이용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 전체 가구의 26%만 직접수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케이블 방송은 이런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많은 국민의 시청권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지상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신들이며, 공익적인 가치



로 봤을 때 이는 오히려 장려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그 26%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제 이야기이며 과연 정확도는 얼마나 따질 수 있는가.

KBS는 내년 하반기 관련 공사가 종료되면 약 96%의 직접 수신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른 방송사도 비슷한 수준이며 동시에 팩트(fact)다. 그리고 또 하나, 난시청 해소에 공을 세웠으며 이는 오히려 장려받아야 한다는 대목. 이는 케이블 자신들이 많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했으니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바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RO(중계유선방송)인데, SO는 주로 대도시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지상파 외에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등 많은 프로그램을 PP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엔 분쟁의 주체가 된 CJ헬로비전도 SO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난시청이 심각한 곳, 즉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나 기타 지방에는 사업진출을 꺼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뛰는 주체는 SO가 아니라 바로 RO들이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탄생한 RO는 SO와 달리 오락 프로그램도, 종편도 송신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상파와 종교방송만 송출해 SO의 20%정도 되는 비용으로 진짜 난시청 지역에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몰타기다. 대도시 위주로 각종 채널을 다양하게 편성해 돈벌이를 하는 SO들은 RO보다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와 재송신 전송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경도 안 쓰던, RO들이 꾸준히 해오던 난시청 지역 해소의 공을 자신의 공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RO들도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SO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협박은 시청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들은 지상파가 원하는 재송신 전송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힘쓰던 RO들은 정작 지상파의 정당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고, 돈벌이에 급급하던 SO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지상파 콘텐츠를 무료로 쓰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난시청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RO에게 강제적인 조항을 베풀어 그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지상파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난시청 해소에 힘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SO가 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케이블'이라는 명칭으로 쓰겠다.

키워드 3) 전파 사용 문제

케이블은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무료(6,204억 원)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런 '무임승차'를 통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또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케이블은 지상파 방송사의 도덕성까지 문제로 삼으며 재송신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전파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케이블측이 하는 '지상파의 무료 전파 사용론'은 현재 통신사들이 700MHz 주파수를 자신들이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펴는 논리



와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지상파가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는 마치 지상파가 전파를 무단으로 점유해 활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다. 전파는 국민의 공공재이다. 전파는 국민의 것이며, 온전히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정당한 시청권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상파가 해당 전파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케이블이나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파'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수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특정단체가 아닌, 온전히 국민의 것이며 그런 국민을 위해 무료 보편적 가치를 가지며 '국가기간'의 성격을 가지는 방송이 전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에서 재단하며 그저 '돈잔치'나 벌일 줄 아는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해서, 그들이 지상파 방송사가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주파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른 방송 및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출현하고 있다. 이 기금은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방통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운용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다.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하며 자신들이 점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케이블과 통신사들은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케이블은 지상파가 무료로 전파를 활용하며 그것을 이용해 광고비용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 주장에는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로 케이블의 플랫폼이 지상파의 광고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속내가 숨어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광고 수익은 해당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 상식이 되어 버린 지금, 케이블측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 거부 이유로 광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광고와 콘텐츠 둘 다 말이다.

정리하자면, 전파는 국민의 공공재이기에 가장 공익성에 근접한 지상파의 활용이 어색하지 않으며, 케이블이 지상파의 광고 수입을 운운하고 싶으면 돈을 따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도 정보 콘텐츠로 봐야 하는 문제는 나중에 미루겠다.

3. 결론

지금 케이블측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간신히 재개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까지 중단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국민 모독 행위이며 더 나아가 '힐포'일 뿐이다.

그리고 케이블 측의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더 이상의 논쟁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가 오고 방송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다양한 시대의 산물이 공익성을 해치며 돈벌이를 시도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함은 다양함의 가치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지 지금까지 지켜오던 공익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디지털 전환 지원 현장을 가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2013년에는 디지털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방송 발전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

이상으로, 방송환경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그 준비 상황은 어떨까.

이웃나라 일본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방통위의 주장대로

잘 운영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저 책상에 앉아 주어진 자료나 검토하며

간간이 통신재벌과 종편, 케이블의 눈치만

살피는 방통위의 결과보고는 잠시 접어두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case 1. 안테나와 TV는 따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현장취재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다주택 건물이었다.

그리고 다닥다닥 건물들이 붙어있는 이 다주택 건물 2층에는 다리를 약간 저는 차○○(나이 50)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자인데, 현재 가정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시청중인 디지털 TV]

안테나 설치비는 전액 지원받았으며 TV 비용은 19만9천 원이 되는데, 이 중 10만 원은 지원받았고 9만9천 원은 본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이 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좀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전에는 한 달에 7천 원 수준의 제일 싼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 유료방송을 끊고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2천 원에 재활용 센터에 판 다음, 디지털 TV를 기다렸는데 이 TV는 일주일만에 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 업체 측에서 디지털 TV와 함께 실내 디지털 안테나만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차○○씨가 사는 곳은 실내 안테나로 신호를 잡지 못한 것이다.



[외부 안테나]

이에 직원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그냥 현수해 버렸고 좁지에 차○○씨는 시청권을 박탈당해 버렸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문의도 했으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무려 2달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공 업체측에서 외부 안테나를 달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차○○씨는 인터뷰 말미에 화면이 깨끗하고 디지털 방송이 좋긴 하지만 자신같이

2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디지털 TV 가격인 9만9천 원은 부담이었으며, (10만 원 지원) 채널이 지상파 5개만 나와 불편했다고 털어놓았다. 동시에 생활이 나아지면 다시 유선방송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는 다채널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고민할 대목이다. 또 디지털 전환 공사 시 외부 안테나를 가져오지 않아 2달 동안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불편을 겪었던 기억은 방통위의 관리감독과 해당 시공 업체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case 2. 디지털 전환 지원했는데... 컨버터는 창고에 있고, 유선이 나오네?

두 번째 현장취재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1층 집이었다.



[지○○ 할머니 댁]

이 집에는 파지를 모아 생활하시는 지○○(나이 72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이 분도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는 대상이다.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발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자 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기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은 할머니의 집에 보급형 디지털 TV가 아닌 시가 69만 원짜리 TV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는 디지털 컨버터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TV에는 버젓이 유료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창고에서 발견된 디지털 컨버터]

할머니의 말로는 디지털 전환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TV를 직접 구입했다고 한다. 이에 시가 69만 원짜리 TV를 어떻게 구입

했냐고 물으니, 자신은 정부생활 대상자가 아니고(차상위장애인) 어느 정도 여력이 되기에 큰 마음 먹고 TV를 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오더니 컨버터를 주고 그냥 가버렸고, 자신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TV를 시청한다고 했다.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자 가구인데도 유선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컨버터를 설치도 안하고 창고에 쌓아둔 것도 이상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혹은, 이 할머니는 디지털 지원을 받았고, 시공업체는 외부 안테나를 설치했다며 해당 사진까지 방통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안테나 같은 것은 없었다. 조작이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땀을 알아보려고 해도 할머니가 원래 자신의 집에 유선이 나오는지 지상파만 나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해당 요금 영수증을 모두 분실해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였다.

첫째, 할머니가 원래 유선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 신청을 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가 69만 원짜리 TV를 구입한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전환 공사를 하러 온 직원이 할머니가 유선을 보고 있으니 사용하지도 않는 컨버터를 창고에 던져놓으라 하고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공사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둘째는 할머니는 애초 유선을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디지털 전환 신청을 했으나 답이 없자 본인 부담으로 TV를 구입했고, TV를 설치하러 온 사람이나 혹은 나중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찾아온 직원이 유선 방송을 보도록 유도했을 경우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서 허위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컨버터는 창고에 버려둔 채로 말이다. 애당초 디지털 TV가 있는데 컨버터를 가져온 이유를 모르겠다. 외부 및 내부 안테나도 없는데 말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 할머니의 경우 엄연히 디지털 전환 대상자로 되어 있으며 할머니는 현재 돈내고 보는 유선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구입하지 않은 디지털 컨버터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창고에 있었다는 점이다.

case 3. 바람이 부는 날이면 TV가 안 나와요

세 번째 현장취재는 같은 양천구 신정동이다. 이○○(나이 65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이 할머니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디지털 전환을 했다고 한다. 이 곳은 양호하게 모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있었다. 총 15만9천 원의 TV값 중 본인이 5만9천 원을 부담했으며, 수신상태는 양호하고 별다른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청중인 디지털 TV]

그런데 이 할머니는 취재 말미에 묘한 말을 했다. 바로 '바람이 부는 날에는 TV가 잘 안나온다는 것'

이에 확인 차 옥상에 올라가 보니 그 이유는 명백해졌다. 바로 기존의 아날로그 안테나에 디지털 외부 안테나를 설치한 것 때문이었다. 아날로그 안테나는 한 눈에 봐도 부식도가 높고 약해 보였다. 그렇기에 바람이 불면 안테나가 흔들리고 디지털 외부 안테나도 동시에 흔들려 수신 상태가 불안해 지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만약, 시공 업체에서 내부 안테나만으로 충분한데 일부러 외부 안테나를 설치한 것이라면? 시공 업체 입장에서는 외부 안테나를 공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에 내부 안테나로도 충분한지만 가끔 무리해서 외부 안테나를 시공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물론 <case 1>의 상황과는 반대이지만, 그래서 혹시 일부러 외부 안테나를 설치했는가 싶어 할머니 방의 디지털 신호를 점검해 보았으나 다행히 의혹은 풀렸다. 내부의 디지털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았다. 할머니는 이제 바람이 불거나 날이 안 좋으면 시청이 힘들어 질 것이다. 물론 아날로그 방송을 볼 때도 그랬겠지만, 역시나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은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로 인해 700MHz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뉴미디어 발전 및 난시청 해소 용도가 절실해지며 동시에 다채널 서비스는 물론, 더욱 진보된 방송가치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저 책상에 앉아 올라오는 보고만 받으며 흡족한 미소만 머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지 할머니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회상하며 마치겠다. case2의 지 할머니는 디지털 컨버터가 창고에서 발견되고 이에 대해 기자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당하자 당황하신 나머지 이런 말도 했었다. "나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들 직장 잃는 것 아니지?" 그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2년
12월 31일
준비
하셨나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은
종료되고 모두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됩니다

Analog Digital

DIGITAL TRANSITION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환 꼭 알아야 할 3가지!!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됩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이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은 종료되고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시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보유하신 아날로그TV에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방송 콜센터」가 여러분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디지털 방송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디지털 방송 콜센터

전화 : 080-2012-012(무료), 1666-1335(유료)

상담시간 : 9:00~21:00(평일), 9:00~18:00(공휴일)

www.dtvkorea.org

플랫폼과 지상파 방송의 현재

김 상 훈
KBS 기술연구소 차장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이동사와 제조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이
플랫폼 사업자와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서비스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WiFi와 3G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와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4G의 상용화는 클라우드 미디어, 모바일 IPTV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휴대폰 선택 기준이
'삼성폰이냐, LG폰이냐'였다면
지금은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폰이냐'가 중요해졌다.
즉, 단말에서 플랫폼으로 중심 가치가 이동한 것이다.
소비자 욕구는 다양해지고
제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API를 개방하여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수평적 생태계 문화가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개념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페이스북은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이한 점은 페이스북은 하나의 웹 사이트에 불과한데 서비스 플랫폼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이 핵심 서비스와 가입자 정보에 대한 API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과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SNS의 원조는 우리나라다.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전 세계 7억 명이 이용하고, 미국 온라인 광고 매출별 노출 횟수에서도 구글, 야후, MS를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의 SNS 서비스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폐쇄형 서비스의 한계와 플랫폼 기반 개방형 서비스의 성장에 대한 대조적인 사례이다.

플랫폼은 시스템에서 핵심 공통 구조를 발견하여 결정하게 되며, 인센티브 제공과 규칙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된다. 사용자의 니즈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최근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영역에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스마트 TV로 전이하여 또 한 번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TV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TV와 모바일을 연동한 N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P-N-T를 아우르는 경쟁이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 이러한 스마트 TV가 가져올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적어도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는 TV에서 SNS하고, 검색하고, 앱을 이용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스마트 TV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가져올 가장 큰 충격은 콘텐츠 유통 구조 변화가 될 것이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TV로 인해 현재 앱의 지그재그 장터인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과 유사한 형태의 방송 콘텐츠 지그재그 오픈마켓이 등장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방송 채널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을 마켓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다. 기존의 라니어한 편성에 기반한 물리적 방송 채널 개념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유료 콘텐츠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현재와 같이 방송 채널에 광고가 붙는 것이 아니라 마켓에서 유통되는 개별 콘텐츠에 사용자 선호도별로 다른 맞춤형 광고가 붙고,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결국 어떠한 플랫폼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다. 플랫폼 경쟁력에서 뒤지고 외주 제작이 많은 방송사는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현재 상황을 C-P-N-T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에 지상파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콘텐츠에 있었다. 방송사 내부에서 조차 지상파는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 플랫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상파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스타들과 스타PD들이 종편과 대기업 계열 PP로 이적하고 있다. 이는 조만간 종편과 PP의 콘텐츠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현재 K-POP 한류 열풍도 지상파가 아닌 YouTube가 주도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트 회사들도 YouTube 마케팅에 더 관심이 많다. 얼마 전에는 슈퍼스타 K3의 시청률이 10.7%로 2주 연속 지상파를 제쳤다는 뉴스도 있었다.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지상파 TV의 직접 수신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고, 시범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 제주도에서는 케이블 가입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회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전환이 준비와 홍보가 부족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컴캐스트 가입자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갑자기 나오면 TV가 안 나오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전화 한통이면 설치까지 해주는 케이블 TV를 신청하는 것이다) IPTV, 위성,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입자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묶어 놓을 락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선택할 태블릿은 UX가 동일한 아이패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플랫폼과 연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개인이 보유한 콘텐츠가 여러 단말에서 쉽게 공유 가능하면 그 기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단말은 어떠한가? 단말은 전통적으로 지상파가 직접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의 전적으로 제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과 같은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삼성, LG와 같은 전통적인 TV 제조사도 애플과 구글처럼 자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상파 플랫폼이 영향력이 있고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지속되어야 지상파 수신 기능을 탑재한 단말 보급도 지속될 것이다. 근본적 고민 없이 앞으로도 양질의 지상파 단말 출시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낙관이다.

KT의 이석재 회장은 방송 산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방송사의 채널에 대한 통제 권한 약화 (종편/보도 채널 등 신규 채널의 급팽창 및 방송사 역할 대행),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대안 콘텐츠 공급자의 급증 (넷플릭스, 애플, 구글), 국내 방송사 콘텐츠 우위 요소가 빠르게 약화 (언어의 문제 극복 가능, 문화적 차이 희석), 뉴스 공급자로서의 독점적 지위 축소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다른 루트로 이용 가능)를 언급하였다. 때서온 지적이다. 이는 결국 콘텐츠와 플랫폼의 위기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콘텐츠는 개방이 필요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방이다. 우리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사용자를 포함한 3rd party의 콘텐츠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웹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negative 전략보다는 그러한 수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콘텐츠를 개방해서 그러한 수요를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광고 붙이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positive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애플은 iTunes Match라는 서비스 모델을 통해 불법 음원 유통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간 사용료 \$24.99를 내면 사용자가 보유한 불법 음원을 DRM이 없는 고품질의 음원으로 대체하여 iOS가 탑재된 어떠한 단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의 70%는 음반사와 저작권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애플의 아이디어와 불법 음원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수익화하는 것이 낫다는 음반사와 저작권자의 결단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애플은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곡을 추천 및 판매하고, 불법 음원 구제로 신규 사용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플의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지는 이득을 얻었다.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융합이 필요하다. 방송의 QoS 보장이 가능하고, 브로드캐스팅에 유리한 장점과 통신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유니캐스팅에 유리한 장점을 결합하여 대중적인 콘텐츠는 방송망을 이용하고, 개인화 서비스와 니치 콘텐츠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전송된 콘텐츠들은 마치 동일 네트워크에서 전송된 것처럼 융합되어 소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차원의 융합이 필요하며, 물리적 융합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 다양화된 사용자 니즈와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송 네트워크는 전송 성능이 우수한 IP 기반의 광대역 네트워크로 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단말은 방송사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 수신과 플랫폼 경쟁력을 회복하는 노력과 함께 HTML5와 같이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 저렴한, 어떠한 OS 단말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표준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 플랫폼 설계하고 이를 단말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Digital



Broadcasting



Technicians



· 30,000원
· 주문 : kobeta@kobeta.com
· 문의 : 커뮤니케이션북스
02-3700-127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2-3219-5635

디지털방송기술 총람 2008



디지털
방송기술
총람
저자

이 창 형
KBS 에너지기술팀 차장
박 성 규
SBS NQC부장, 정보통신기술사
김 상 철
MBC 중계기술국 차장
박 창 목
KBS 디지털인프라팀 차장
김 영 석
MBC 모바일기술부 차장

Chapter 1. 디지털방송 개요
1.1 텔레비전의 기초
1.2 디지털 방송 기초기술
1.3 디지털 TV
Chapter 2. 지상파방송 전송방식
2.1 ATSC 전송방식
2.2 DVB-T 전송방식
2.3 ISDB-T 전송방식
2.4 DMB-T/H 전송방식(중국방식)
Chapter 3. 위성방송 전송방식
3.1 위성 중계
3.2 통신위성
3.3 지역위성

3.4 무궁화 위성
3.5 디지털 위성방송
3.6 위성이동중계 SNG
3.7 DVB-S2
3.8 위성 DMB
Chapter 4. 이동수신방송 전송방식
4.1 지상파 DMB(T-DMB)
4.2 위성 DMB(S-DMB)
4.3 DVB-H
4.4 MediaFLO
4.5 ONE SEG Mobile
4.6 HSDPA (MBMS)
4.7 WERO

Chapter 5. 디지털라디오 전송방식
5.1 디지털라디오의 출현과 동향
5.2 Analog 라디오 방식별 비교
5.3 디지털라디오 전송방식
Chapter 6. 데이터방송 방식 비교
6.1 ACAP
6.2 OCAP
6.3 DVB-MHP
Chapter 7. HD중계 전송 기술
7.1 HD중계 방송
7.2 중계방송의 구분
7.3 중계 전송방
7.4 비압축 통합 광전송망

7.5 SNG 전송망
7.6 방송용 전용회선
7.7 대량행사 중계 현장 전송망
Chapter 8. DTV 응용서비스
8.1 MMS(Multi Mode Service)
8.2 DTT
8.3 SDDS
Chapter 9. HDTV 영상 제작기술
9.1 HDTV 기술의 특징
9.2 HDTV 영상 제작 기술
9.3 HD 영상 제작 기법
9.4 DVE 제작 기술
부록 HD 방송 포맷/방송기술 약어

2011년 출판된 방송기술 책 엿보기



디지털방송기술 총람개정판

(이창형, 박성규, 김상철, 박창목, 김영석 공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방송 기술 전반을 정리한 책이다. 디지털 TV 방송,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이동통신 방송, 디지털 라디오, 데이터 방송, HD방송 등 방송 전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책은 저자들의 풍부한 방송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졌는데 2011년 개정판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DTV 응용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반 제작 기술을 추가했다.



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폴 시브라이트, 위르겐 폰 하겐 저)

디지털 전환은 화질과 음질의 혁명과 함께, 압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으로 텔레비전 산업의 지형을 거의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 책은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방송의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송 규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방송시장과 기술 개발 동향

(첨단기술정보분석연구회 저)

2012년 전국적인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앞서 2010년 지리적 특성,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해 8개 지역 중 단양군, 울진군, 강진군 등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2011년에는 그 규모를 더 확대해 독립적 전파환경을 갖춘 제주도에서 아날로그 시범 종료를 추진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디지털 방송에 관심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사업전략 수립과 시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날로그TV 및 DTV에서부터 3DTV, UHDTV까지 현대 텔레비전 방송공학

(이기창 저)

아날로그 텔레비전 기술에서부터 디지털 비디오 기술, 아날로그 오디오 기술, 디지털 오디오 기술,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압축기술 등 방송 기술 전반을 다룬 책으로 이외에도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압축기술,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방식(ATSC, DVB, ISDB 방식), 차세대 텔레비전 방식(3DTV, UHDTV, Smart-TV)까지 소개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손의영 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방송정보통신 관계법령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방송통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함께 수록해 정보통신설비 시공분야의 전반적인 법령의 이해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 유지 · 보수에 대한 기술기준을 상호 연계가 되도록 했다.



3DTV 3차원 입체영상 정보처리

(호요성, 김성열 공저)

3차원 정보 표현 방법에 따라 3차원 정보를 획득, 표현, 처리하는 포괄적인 기술을 소개한 책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정보와 영상 기반 3차원 비디오를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3차원 비디오 정보처리에 대한 추세를 반영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 실감방송 연구센터에서 그동안 3차원 비디오 정보처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들을 다루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공지〉

1. 2011 방송기술대상 수상자

- ▲대상 : EBS 디지털전환 추진 및 ASO 지원 운영팀
- ▲우수상 : MBC 김성우, KBS 박주택, SBS 하태웅
- ▲격려상 : BBS기술인협회, OBS 강진팔, CBS 황춘식, MBC 박해준, KBS 김철성, KBS 김병수, YTN 이재우

2. 방송기술저널이 더욱 스마트해 졌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기술저널이 더욱 똑똑해 졌습니다. -방송기술저널 공식 트위터(KOBETA.com)를 통해 매일 주요뉴스 및 공지가 서비스(팔로잉 필요)

옴즈맨 코너 (내가 편집장이라면?)

〈2면 증편 정상개국 가능한가?〉기사가 좋았습니다. 예언하셨네요. -김민준- (강원도 원주시 / 학생)

〈3면 인터뷰 참가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수광- (트위터 아이디 carisk001)

〈방송기술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journal@kobeta.com 혹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공식 트위터(KOBETA.com)로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연말 ... 화려하게 혹은 조용하게?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올 연말에는 대작영화뿐 아니라 작지만 올림이 큰 독립영화까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화려한 액션과 풍성한 볼거리로 무장한 상업영화로 화려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규모는 작지만 삶의 향기와 깊이를 잔잔하게 느낄 수 있는 독립영화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다음 달 초까지 '작은 영화의 조용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독립영화를 한 데 묶은 특별 기획전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열린다고 하니 독립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화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 상업영화 골라보기〉

미션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
(12월 15일 개봉예정)
러시아 크림린 궁 폭발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를 맞게 된 IMF, 국가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IMF 조직에 대해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하고, 조직의 과거도 정체를 모두 지워버린다. 순식간에 국제 테러리스트가 되어 버린 특수비밀요원 '이단 헌트'(툼 크루즈)는 자신과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상 최대의 불가능한 미션을 다시 시작한다.

퍼펙트 게임

(12월 21일 개봉예정)

피나는 노력과 끈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자리잡은 롯데의 최동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해태의 천재 투수 선동열! 세상은 연세대와 고려대, 경상도와 전라도, 롯데와 해태로 나뉜 두 사람을 공존할 수 없는 라이벌로 몰아세운다. 결국 운명적인 첫 번째 맞대결에서 1-0으로 해태의 선동열이, 두 번째 대결에선 2-0으로 롯데의 최동원이 우승의 영광을 안는다. 그리고 1987년 5월 16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경기였던 최동원과 선동열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마이웨이

(12월 22일 개봉예정)

1938년 경성, 제 2의 손기정을 꿈꾸는 조선청년 준식(장동건)과 일본 최고의 마라톤 대표 선수 타츠오(오다기리 조).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강한 경쟁의식을 가진 두 청년은 각각 조선과 일본을 대표하는 세기의 라이벌로 성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준식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고 그로부터 1년 후, 일본군 대위가 된 타츠오와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던져진 두 청년은 중국과 소련, 독일을 거쳐 노르망디에 이르는 12,000Km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겪으며 점차 서로의 희망이 되어가는데 ... 적으로 만나 서로의 희망이 된 조선과 일본의 두 청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한일 양국 최고 스타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있는 영화.

〈조용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 독립영화 골라보기〉

르 아브르
(현재 상영작)
2011년 칸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 수상한 영화로 관객 모두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 서북부의 항구도시 르 아브르, 사랑하는 아내 아를레티와 친절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구두닦이 마르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난민 소년 이드리사를 숨겨주게 되고, 설상가상 아내가 병으로 쓰러진다. 소년을 쫓는 마을 경감 모네의 추적이 시시각각 조여오는데...

오래된 인력거

(12월 15일 개봉예정)

가난은 단지 불편하고 귀찮은 것일까? 기쁨의 도시라 불리는 인도 최대의 도시 캘커타. 그러나 그 이면에는 4백만 명이 넘는 절대 극빈자가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곳에 맨손과 맨발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력거꾼 '살람'이 있다. 아내의 병원비, 가족의 생활비를 벌면서 틈틈이 돈을 모으고 있는 '살람'의 꿈은 하루 빨리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12월 22일 개봉예정)

나는 엄마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삽니다. 동생 류랑 아빠는 저기 멀리서 따로 삽니다.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더니, 이런 꼴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기 저 위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아빠랑 류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형은 화산이 꼭 폭발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철부지 내 동생은 가만 라이더가 되고 싶다고나 하고, 정말 어린이 같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새로 생기는 고속열차가 반대편에서 서로 달려오다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은 친구랑,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친구랑 거길 가려고요. 기적은 일어날까요?

〈백선하 baek@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 중 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700MHz 주파수, 방송에 할당되어야 한다

2004년, 우리는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을 결정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흥역을 겪었다.

당시 정부가 선택한 디지털 전송방식인 ATSC 방식은 DVB-T에서 가능한 한 개 주파수로 여러 지역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SFN (Single Frequency Network)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한 주파수 간격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MFN (Multi Frequency Network)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식있는 방송기술인을 제외하고는 MFN을 바탕으로 지상파 TV 방송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 과연 음영지역 발생에 따른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 방송기술인들은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이다. 최근 많은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의 난시

청 해소를 위해 700MHz 대역을 다른 용도가 아닌 방송용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견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공공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인사라면 당연히 해당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승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맞는 말이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2013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을 한 후에 난시청 지역에는 극소출력 중계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700M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700MHz 주파수 대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전환 후 난시청 해소를 적시에 하지 못해 발생한 여러 문제는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 자명하다. 상상하기도 싫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었

고, 이제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완전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기술로 출현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상황을 살펴보면, DVB-T로 디지털 전환 계획 추진하는 중에 디지털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의 고품질 서비스와 경쟁하기위해서 MPEG2 압축방식기반 SD 서비스 위주인 DVB-T 기술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2009년 DVB-T와 같은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3개의 HD 서비스가 가능한 H.264기반 DVB-T2 발표하게 되었다. 또 DVB-T, 혹은 DVB-T2 방식에 대해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TV 방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주었다. 앞으로도 Full HD급 3D 방송, UHD TV 방송

등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방송 방식의 출현이 예상된다. 이런 영국의 사례를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향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물론 포괄적인 범위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차세대 방송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끝으로 기고문의 마무리를 갑을하려 한다. 미국의 켈컴을 비롯한 주요업체는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적화된 통신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자칫 많은 로열티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명하지 않은가. 모든 이성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은 700MHz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가리고 있다.

박 영 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



제작 자율성, 지킬 의지가 있는가?

2011년 12월 1일, 날치기 대리투표로 탄생한 조·중·동·매 종편이 합동 개국식과 함께 방송을 시작했다. 10여일이 지났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개국 이후 보여준 방송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TV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10분간 화면이 분할되는 대형사고를, JTBC는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MBN은 본방 시간에 재방송을 보내는 실수들이 이어졌다. 편성도 수년전 개봉한 영화를 재방 삼방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보도에서 가장 앞설 것으로 예측됐던 TV조선은 박근혜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형광등 백 개를 켜놓은 듯 한 아우라'라고 아부를 떨지 않나, 7억 원이상의 불법 로비자금으로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된 마당에도 '경제 대통령' 등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이미지 관리를 해주고 있다. 채널 A는 강호동 야쿠자 연부설에 A양 동영상 뉴스로 관음증을 유발시키며 그야말로 '후진 케이블 채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들은 4개 종편의 첫 방송을 보고 다들 안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종편이 어떻게 후지니 지상파와는 안심하고 말 것인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저녁 서울광장에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번개가 있었다. 그리고 11월 22일 밤에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다. 2011년 여론지형이

확실히 한 나라당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민심 현상이었다. 그런데 KBS와 MBC는 바로 이곳에서 시민들의 야유와 비판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서는 조·중·동·매 방송과 지상파 방송이 하등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방송사 장악을 위해 국세청과 감사원, 검찰을 동원한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PD수첩> 탄압 등을 3년 내내 이어왔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들이 무차별 징계와 지역발령, 제작 외 부서로 속아내기 등으로 비판적 언론인들을 통제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정부비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관제 홍보방송이라 할 만큼 G20 홍보와 4대강홍보에 치우치지 않나 KBS는 친일 부역자와 독재자 미화 방송까지 내보냈다. 또 <추적 60분>과 <PD수첩> 천안함 편과 4대강 편이 불방되는 소동을 겪었으며, 손석희, 정관용, 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등 정권 비판적 방송인들도 브라운관에서 쫓아냈다.

이 같은 지난 3년간의 행태는 제작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 KBS와 MBC 본부가 제작 자율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KBS 기자와 PD 60.9%가 회사 간부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했고, MBC도 조합원 93.2%가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제작 자율성이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방송사 내부의 제작 자율성은 사장 한 명만 교체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다. 제작 자율성은 정권의 방송 장악만이 아니라 자본권력에 의해, 간부들에 의해서도 수시로 침해당하고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 방송법 개정 당시 방송노동자들은 파업과 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 그 결과 실행기구와 분쟁시 해결장치가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이 있지만 방송법 제4조 4항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방송편성규약은 편성위원회를 통해 제작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침해당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제작현장에서의 제작 자율성은 사치로 느껴질 만큼 정권차원의 언론장악은 본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현 언론인들의 가장 큰 숙원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되었다. 하지만 제작 자율성 보호 장치만 제대로 작동했다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비판과 감시기능을 상실하고, 70년대 식 관제홍보 대열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폐지와 언론인 탄압 등의 사건이 이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내부 제작진들을 응원하며 연대해왔다. 하지만 지금 방송은 이러한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 만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해 있다. 지상파 방송이 조중동 방송과 다를 바 없다는 시

민들의 비판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민들은 또 추락한 방송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SNS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뉴스를 만들고, 유튜브시키면서 기존 주류 언론의 의제설정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보다 박원순에 대한 의혹 보도가 6배 이상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박원순 후보를 선택했다.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3사가 SNS에 쫓기는 흑독한 현실이다. '나꼼수' 현상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종편이 출범했고, 시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을 믿지 않는다. 만약 2012년에도 지난 3년과 같은 모습을 반복한다면 지상파 방송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작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한다면 여전히 살아남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층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작 종사자들은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장치들은 저항하지 않는다면 또 제작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저항하고 싸우는 방송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